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2-2호 | 2022년 4월 18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노웅래 | www.idp.or.kr

##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정 상 희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코로나 19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여야 대선후보 공통의 공약으로, 이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현정부에서부터 논의하여 빠르게 통과된 후 바로 지원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이와 함께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정비 상환감면제도(한국형 PPP)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고객 친화형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계속해서 나가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폐업 및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 및 지역 중심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함께 한시적 소비쿠폰 지원 검토
  - 고객중심의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 기업', '골목 산업'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구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속가능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고정비 절감 등 빠르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코로나 19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손실보상, 고정비 절감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마련 요구

-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서비스 증가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정책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음
- 즉, 언제 폐업을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은 이들에게 크게 와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빠른 손실보상,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정책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쿠폰 발행 등 매출증대 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함

□ 이번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공약인 코로나 19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이 온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50조원 규모의 빠른 추경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번 대선 여야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비롯해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임에 따라 신속한 실행을 위해서 관련 공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안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온전한 보상,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임
  - 2021년 4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 업종까지 포함하였지만, 영업시간,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매출액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도 존재함
  - \* 음식점업 등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손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하였음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협의가 필요
-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피해등급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참고.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상한액은 1억원)하되 50%는 선보상 하는 방식임
- 즉,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상대상, 보상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참고하여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의 경우 이미 발의된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환 의원(2021.12.22.), 우원식 의원(2021.12.20.))이 발의되어 있음

○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협의를 신속하게 논의하여 빠르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실행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함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빠른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인수위와 추경안 협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관련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정부에 추경안 요청을 하였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을 하겠다고 늦장을 부리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진정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인수위에서 제출된 추경안이 현정부에서 통과될 경우 어색하니 새정부에서 추경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발언을 반복한 것임과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 처한 어려움보다 일종의 체면치레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현 정부를 통해 인수위의 추경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해당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즉, 새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그 만큼의 시간 낭비와 함께 국민의 힘이 2022년 1차 추경이 선거용 추경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였던 행위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르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하여 빠른 추경 협상을 통해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힘 인수위에서 기존에 주장하던 대로 50조원의 추경을 위해 필요한 지출구조 조정 금액과 함께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 등 추가적으로 가능한 대안 등을 제시되어야만 정부 및 민주당에서 빠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고정비 상환감면제도(한국형 PPP)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등 정책이 필요함**

- 고정비 상환감면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유지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액 가운데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한국형 PPP)는 제대로 된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와 함께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즉,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비를 절감시켜주는 정책임과 동시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킴에 따라 휴폐업 및 실업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빠르게 시행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우원식 의원, 2021.10.5.)이 현재 발의된 상황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 및 지역 중심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정비 절감을 비롯하여 정책자금 등 자금지원 정책과 함께 매출증대를 지원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지역화폐는 경영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하여 사용처와 사용기간 또한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 이를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 따라서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함께 지역화폐 또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적인 매출증대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화폐 발행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함께 효과적인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단비와 같았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발행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KDI의 연구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업종의 휴폐업을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2020.12)

○ **고객중심의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 기업’, ‘골목 산업’등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구축**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거주지 중심(반경 500m 정도)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명 슬세권(슬리퍼+세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등 거주지 중심의 소비 트렌드와 함께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통한 외부 소비자 유입은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회로 작용

- 한국경제-비씨카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5월 소비자 자택반경 500m 이내 상권 결제건수는 21.2%로 2018년 동월(16.1%) 대비 5.1%p 증가한 반면 5km 밖 상권의 결제건수 비중은 5.4%p 감소

-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이 지속가능한 경쟁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에 속한 개별 주체들의 협업 및 조직화는 필수적임

- 기업이 성장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에 따라 다양한 부서로 나뉘어서 운영되듯이 골목상권 또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골목상권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상권의 상인회, 협동조합 등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고객 맞춤형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는 중앙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

는 국민의 힘 정책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기존 골목상권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고객중심의 상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지역의 자원과 결합한 특색 있는 상권조성 역할 또한 수행
- 국민의 힘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특별한 공약실행 주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기존 중앙중심의 획일화된 공약이라고 판단됨
- 또한 지자체 중심의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민생 중심의 정책 실현의지 표명 필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빠른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등 민생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함
-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청와대를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의 빠른 시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민주당과 협의를 하는 것임
-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겠다고 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향후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추경 논의를 진행해야 함
- 민주당도 추경에 대한 인수위의 대안 마련 요구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매출증대와 관련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여야 대동소이한 공약으로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추경안을 현정부에서 제출하는가, 새정부에서 제출하는가로 논쟁하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추경안이 처리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임